인 사 말

전 향 숙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식품이 대량으로 공급되어 국민들은 풍부한 식생활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약의 잔류, 유해물질 오염, 식품첨가물, GMO, 방사능 오염 등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의 증진 혹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식품보건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식품보건행정의 근간은 식품 관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은 헌법이 설정한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공급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1962년 1월 20일에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법령이 제정되어 식품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법 체계에서는 개별 법률별로 식품이 분절되어 관리되고, 각각 법률별로 빈번한 부분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법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아니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식품의 출현 및 국제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안전(安全)을 넘어 안심(安心) 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은 식품분야에만 국한된 지엽적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국가 '안보(安保)'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과 정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호의 기획특집 주제를 "식품법 최신 동향"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그 동안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제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DS495) 상소심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루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 산업체 및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